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사회관계장관회의 | |
| 회 차 | 2024 - 7 |
| 안건유형 | 심의 |

“대학이 살리는 지역, 지역이 키우는 대학” 대학-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(안)

2024. 9.



부 처 합 동

I. 추진배경

□ 지역과 지역대학의 소멸 압력이 국가 인구·경쟁력 감소 요인으로 작용

- 지역은 저출생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*의 이중고 → 일자리·교육·문화 등 활력 저하 →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전이

* 청년인구 중 수도권 비율 상승폭(2.9%p, '13년 52.4% → '23년 55.3%)은 전체인구 대비 (1.2%p, '13년 49.3% → '23년 50.5%) 2배 이상으로 청년 유출이 지역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

- 수도권 인구집중은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국가 인구감소 위기 가속화

※ '22년 국가 전체 출산율은 0.78명인데 비해 서울 출산율은 0.59명으로 국내 최저

- 지역대학 역시 학령인구 감소·재정악화로 소멸 압력 상승 국면

※ '13년 대비 '23년 지역대학 입학생수 81,326명 감소(329,836명→248,510명) 및 신입생 미충원율 3.2%p 증가(2.8%→6.0%), '23년 파산으로 인한 첫 폐교 사례 발생

- 청년층 유출을 막는 보루이자 지역사회 핵심 축인 대학이 무너질 경우 지역은 교육·일자리·문화 전 영역에서 경쟁력 급감 우려

※ 지역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(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, '21)

□ 대학-지자체가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마주할 모멘텀 부족

- 대학이 지역 수요보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집중*하여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유인 저하 및 지역대학과의 파트너십 형성 난항

* 국고 지원금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제시한 교육·연구·산학협력 영역별 발전계획(Top-Down)에 대학이 사실상 기속되어 동형화 발생

- 교육관계 법령 역시 '학령인구 대상 교육서비스*' 위주로 되어있어,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학과 지역의 파격적인 실험과 도전을 제약

* 개별대학이 학생에 대한 입학전형·학사관리·학위부여 방식과 소속 교원의 복무 등에 집중되어 대학 간, 대학-산업체-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부족

⇒ 지역은 대학과 함께 '지역인재양성-취·창업-정주'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, 대학은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토록 대학 지원정책 전면 전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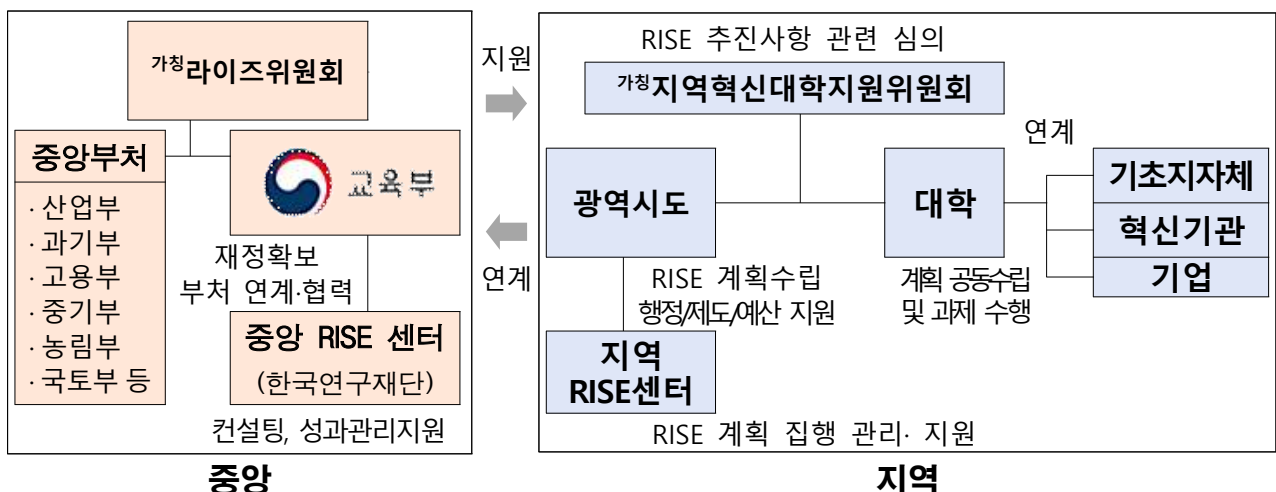
II. 대학-지역 동반성장 지원 전략

- ❖ **교육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·이양하여 지역중심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: RISE**
: 지자체가 교육·일자리·주거·문화·복지 등 전 영역에 걸친 지역발전전략에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토록 권한 부여 + 대학은 학·내외 벽을 허물고 새로운 활로 개척
- ❖ **새로운 생태계에서 대학과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혁신모델 창출 : 글로벌대학**
: RISE 본격 시행에 앞서 대학-지역의 공동 기획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혁신성 높은 모델에 재정투자와 규제개혁을 집중 지원하여 성과 창출 + RISE 내 확산 도모

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: 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

- **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·이양('25~)**
 - 교육부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자체 보조 예산(약 2조원)을 확보하고, 지자체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RISE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지원
- **중앙부처 대학지원사업 연계로 정책 시너지 창출**
 -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대학지원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, 지자체가 중심이 된 범부처 사업의 연계 플랫폼으로 기능
- **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**
 - 시·도별로 RISE 추진사항을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, 대학 업무를 기획하는 전담부서와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기관 정비

<RISE 추진 체계도>



□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

-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여 강력한 혁신 경쟁 촉발
 - 현재 평판(Name Value)이 아닌 혁신의지·혁신계획 중심으로 선별하고 집중 지원*함으로써 과감한 구조조정과 대학의 새로운 역할 개발
 - * '23~'26년 30교 지정, 교당 최대 1천억원, 규제혁신 우선 적용, 범부처·지자체 투자 유도
- 대학 내·외 벽을 허물기 위한 규제개혁 Test-Bed 역할 수행
 - 글로컬대학의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규제특례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, 성과를 분석하여 전체 대학에 확대 적용(법령·지침 개정)
 - * 글로컬대학은 「지방대학육성법」상 행·재정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특성화지방대학으로, 동법의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(4+2년)으로 법률·시행령상 규율 완화·배제 가능
- 대학과 지자체는 프로젝트 경험과 역량을 RISE 자원으로 활용
 - 미지정대학은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학 특성에 따라 발전계획을 고도화하고 RISE 체계에서 구현

< 대학을 통한 지역혁신 사례 >

| | | |
|---|--|---|
| <p>말뚝대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 (스웨덴)</p> |  <p>폐쇄된 조선소 부지에 대학 유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웨덴 조선업의 쇠퇴로 '87년 '코쿰스 조선소' 폐쇄(현대중 1\$로 크레인 구입) ○ 市 IT·바이오디자인 첨단 산업 육성 계획 수립 ○ '98 말뚝대학교 설립(스타트업 중심) |  <p>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부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 주거 기업단지 '터닝 투르소' 및 '미디어 에볼루션 시티' 건설 ○ 20년간 일자리 6만개, 인구 10만명 증가 ○ 고령화 소멸위기 도시에서 젊은 도시화 |
| <p>청년인구 유출 소도시에 글로벌 교육인구 유입 (일본)</p> |  <p>벳푸시 산간에 대학 설립(APU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3만 소도시,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 ○ '20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설립 ○ 50개국, 50% 이상 국제학생·교원 목표 |  <p>약 6천명 재학생(유학생 3천명) 유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교 전 382개 기업 등에서 400억 이상 장학기금 조성, 市, 부지 및 장학금 지원 ○ 영어 수업, 100개 이상 학생활동문화행사 지원 등 다문화 교육환경 집중 |

Ⅲ. 대학-지역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(안)

1.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안착

❖ 지자체가 위임받은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활용하여 대학-지역 동반성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·규제특례 등 제도를 일괄 정비하고 부처협업 확대

① 추진체계 구축 :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전문성 확보

- RISE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중앙과 지역 단위 거버넌스 마련
 - 중앙단위 위원회는 시·도 예산 배분기준·성과관리 등을 심의하고, 지역단위 위원회는 지역 RISE 기본계획·RISE 센터 지정 등 심의
 - ※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(중앙·지방 RISE 위원회 권한·구성 등에 관한 근거 신설)
- 시도별 대학지원 전담부서 및 지역 RISE센터 운영
 - 시·도는 지역 RISE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규제특례* 신청·적용, 지역 RISE센터는 사업 공모·평가·성과관리 등을 위탁받아 운영
 - *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(규제특례 신청 주체를 초광역 플랫폼에서 시·도로 전환하고, 비수도권→수도권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RISE에 부합하는 규제특례제 확립)

② 부처 협업 확대 : 대학-지역혁신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

❖ 대통령 말씀 : “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, 협력을 활성화” (‘24.1월)

- RISE 체계를 플랫폼으로 범부처 협업 추진
 - :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교육부·과기정통부·산업부 업무협약 체결(8.22.), 인재양성·기술개발·창업지원 등 협업을 위한 교육부·중기부 업무협약 체결 예정(9월)
 - (산업통상자원부) 지역산업활력펀드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(CUBE), 지역앵커기업-지역대학 전략기술공동개발(M&LS)
 -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학연 플랫폼 중심의 지역혁신기관 벽 허물기
 - (중소벤처기업부) 지역인재·외국인 유학생-지역기업 매칭, 산학연 공동 R&D, 창업지원 강화

⇒ 부처 간 정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요청

<참고 : RISE를 통한 범부처 협업 사례>

<범부처 사업의 RISE 연계 유형>

- ①유형 : 각 지역은 '범부처 정책메뉴판'에서 제시한 부처별 사업 중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활용하여, RISE 계획의 단위과제를 기획
- ②유형 : 1유형+지역RISE센터에서 범부처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협업
- ③유형 : 2유형 + 범부처 사업의 자치단체 보조 전환 및 지역자율 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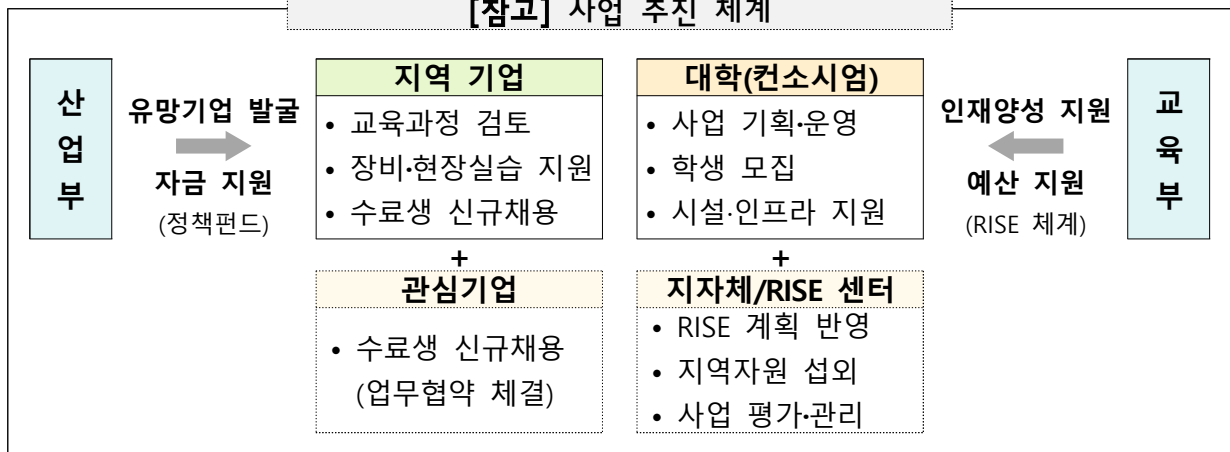
※ 중앙부처 인재양성사업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계적 이관 협의

① **산업+교육** 지역산업활력펀드 연계 맞춤형 형 인재양성(CUBE*) : 연계 1유형

* Customized, University-Based Education and Training

- ▶ (필요성) 자금 및 인력수급 여건이 불리한 지역 소재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
- ▶ (내용) 산업부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펀드(1,100억)를 공급하고, 대학은 기업과 협의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
 - 지역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고, 기업의 연구설비와 전문인력도 교육에 활용해, 수료 이후 즉시 채용가능한 현장 중심 인력양성
- ▶ (추진체계) 지자체(지역RISE센터)가 동 사업 내용을 반영한 RISE 계획 과제를 기획하고, 추진 의사가 있는 대학-기업 컨소시엄 선정·성과관리 등 진행

[참고] 사업 추진 체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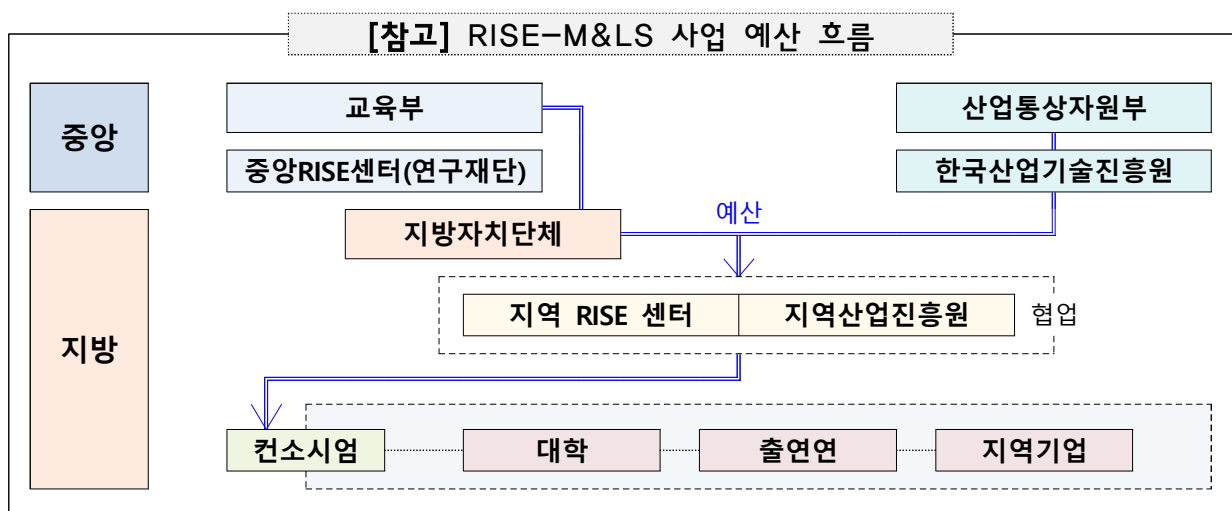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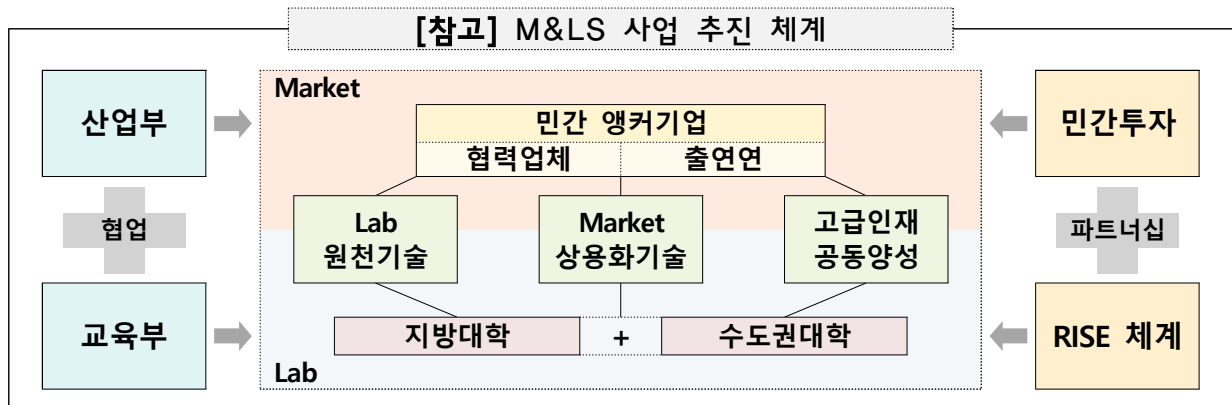
② **산업+교육** 지역앵커기업-지역대학 전략기술공동개발(M&LS*) : 연계 2유형**

* Market and Lab for System

** 지역RISE센터와 지역산업진흥원이 사업을 공동 관리(예산집행체계 연계 추진)

- ▶ (필요성) 차세대 혁신제품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, 지역의 혁신주체인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및 대학-지역기업 간 공동 R&D를 증진할 필요
- ▶ (내용) 지자체가 지역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개발 수요를 발굴
 - 지역 대학·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중대형 기술개발(예: 항공기 관련 중소형 엔진)을 추진

▶ (추진체계) 대학·기업이 참여하는 완제품(시스템) 단위 R&D를 RISE 체계 내 수행



③ **과기+교육** 학연 플랫폼 중심의 지역혁신기관 벽허물기 : 연계 2유형

- ▶ (필요성) 지역 대학과 출연연은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이나, 자발적 협력 유인이 부족하여 학·연 공동 시너지 창출 저조
- ▶ (내용) 지역대학과 출연연 주도로 지속가능한 학·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,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고도화 지원
 - 권역별 학·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이 중점 지역혁신 분야를 설정하여 분야별 인력양성, 신기술 육성,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
 - ‘대학-출연연 간 벽허물기’를 통해 개방형 인력교류 등 대학과 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 확대, 학·연협력플랫폼의 RISE 연계 등 협업 강화 추진
 - 대학·출연연 등 혁신 주체가 협력하여 대학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국가 연구소(NRL 2.0)로 육성
- ▶ (추진체계) 지자체(지역RISE센터)와 협력하여 학연협력플랫폼 사업의 RISE 연계를 추진하고, 대학-출연연 벽허물기, NRL2.0등 부처간 협업 강화 추진

4 중기+교육 지역주력산업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연계 : 연계 1유형

- ▶ (필요성) 레전드 50+의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(자금, 제조혁신, 판로 등)과 RISE의 인력양성 체계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부터 기업성장까지 연계 지원

※ 레전드(Region+end) 50+ 프로젝트 : 여러 기업지원 수단(7개 사업)을 연계한 프로젝트 하나로 지역기업 지원을 끝내어, 우리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을 50% 이상 달성하도록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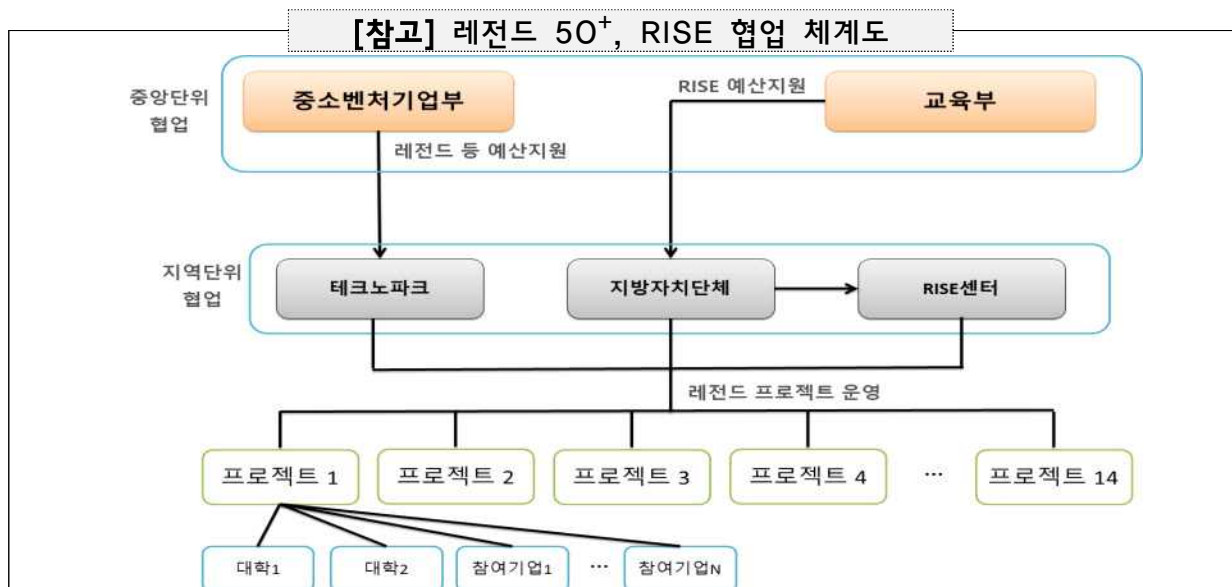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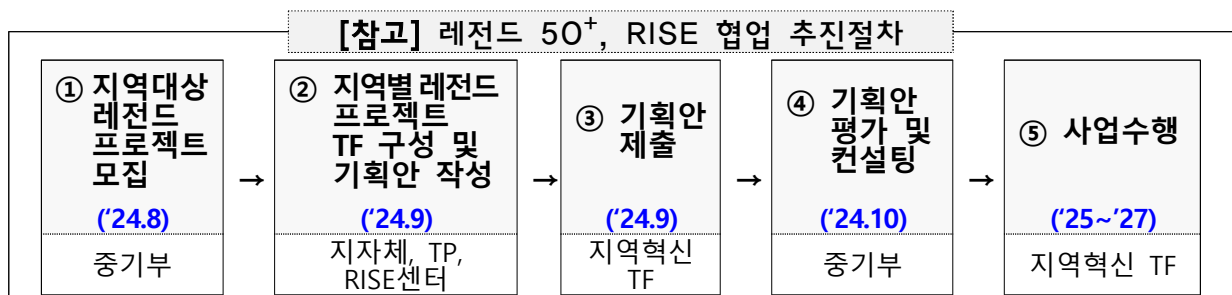
<레전드 50+ 연계 사업 분류 및 '24년 예산 (단위 : 원)>

| 분야 | 사업명 | '24 예산 | 분야 | 사업명 | '24 예산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컨설팅 | 중소기업혁신바우처 | 140억 | 수출 | 수출바우처 | 100억 |
| 창업·성장 | 창업중심대학 | 100억 | 사업화 | 지역주력산업기업지원 | 110억 |
| 제조혁신 | 스마트공장 | 330억 | | 지역혁신생태계조성 | 10억 |
| 정책자금 | 중진기금 정책자금 | 2,000억 | 계 | | 2,790억 |

▶ (내용)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추진

- [중기부] 레전드 50+ 2.0 사업에 지자체별 TP-RISE센터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, 지자체에서 레전드 프로젝트 기획시 인재양성+기업지원을 반드시 연계하여 제안
- [교육부] 중기부에서 발굴한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RISE체계내에서 운영하도록 RISE센터와 TP간 협의체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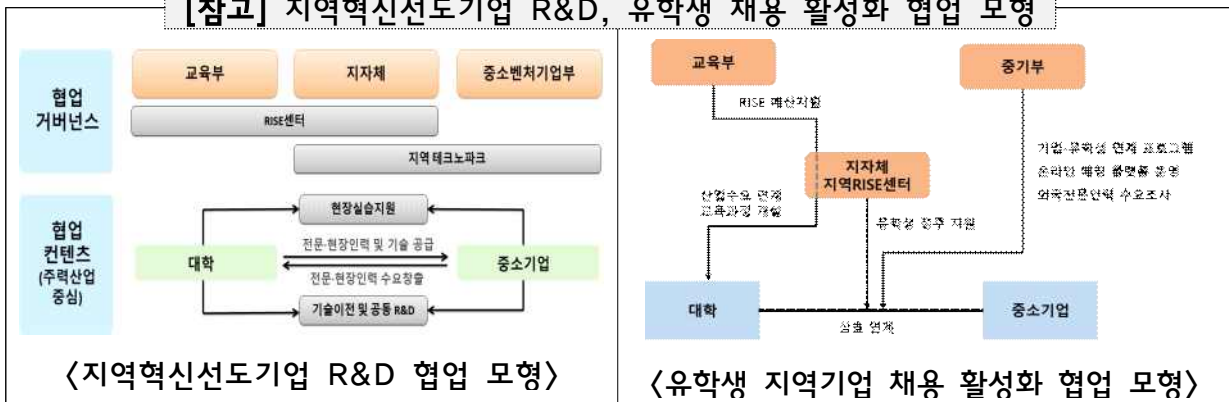
▶ (추진체계) 중기-교육부 공동 총괄하에 지역 주도의 '레전드 50+ 2.0 프로젝트' 수립·실행



⑤ **중기+교육** 지역혁신선도기업 R&D 협업 : 연계 1유형

- ▶ (필요성)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벗어나, RISE 체계와 협업하여 **지·산·학·연 협력생태계**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
 - * 그간 R&D는 개별 기업 위주로 운영되어, **지역-중소기업 대상 R&D**는 동 사업이 유일
- ▶ (내용)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대학, 대·중견기업,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R&D를 수행하는 ‘지역혁신선도기업 R&D’ 신설(‘25~)
 - * 사업 유형 : ① 컨소시엄형(지자체+중소기업+대학, RISE 연계) ② 일반기업형(단일 기업 단위)
- [중기부] 컨소시엄형 과제 기획시 대학 참여가 필수이며, RISE 참여 대학 등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기술이전·공동 R&D, 현장실습 등 수행
- [교육부] RISE 참여 대학이 관내 선도기업과 공동 R&D를 수행할 수 있도록, RISE센터 등이 지역 과제 공모시 관련 내용을 포함
- ▶ (추진체계) 지역별 (地)지자체-(産)중소기업-(學)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, ‘대학發 혁신’과 ‘선도중소기업發 혁신’ 간 시너지 창출

[참고] 지역혁신선도기업 R&D, 유학생 채용 활성화 협업 모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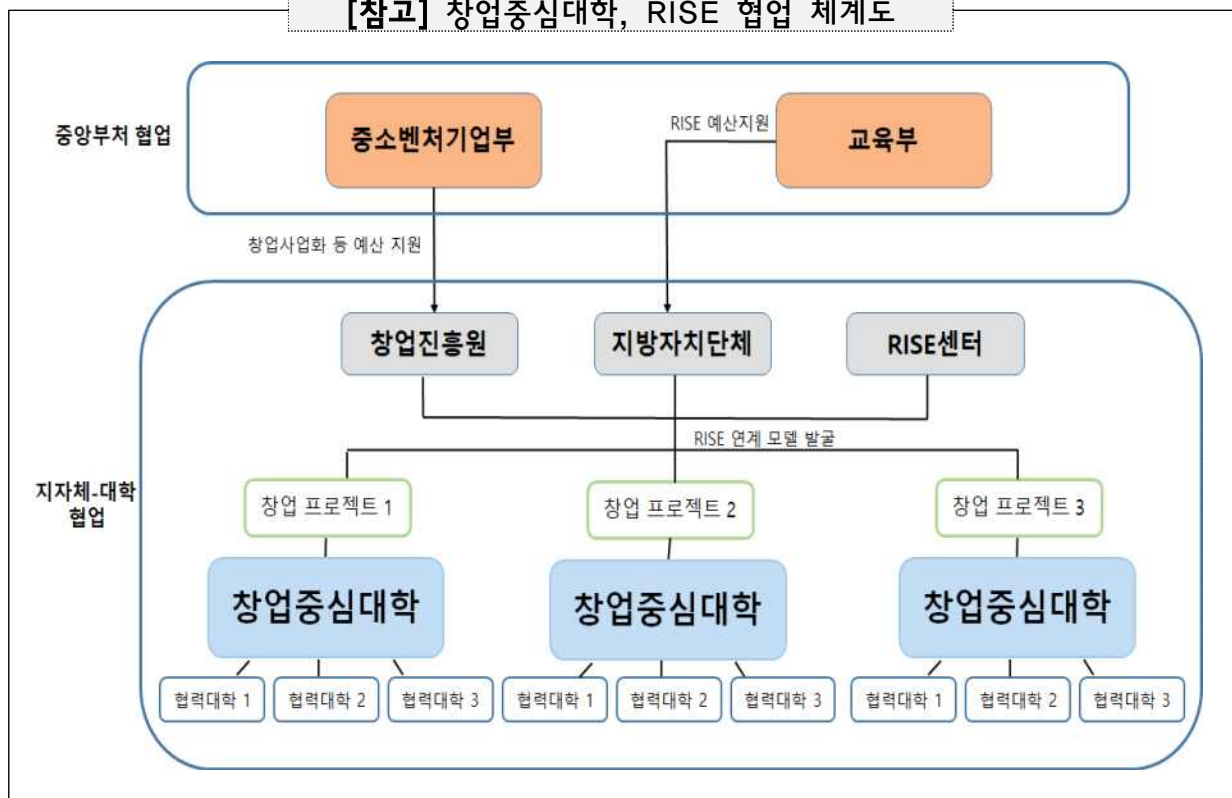
⑥ **중기+교육**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 활성화 : 연계 1유형

- ▶ (필요성)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수요와 지역기업의 구인 수요는 증가하나, 구인·구직 정보 부족, 수요·공급 미스매칭 등이 외국인 유학생 활용에 걸림돌
- ▶ (내용) 대학에서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인·구직 매칭, 유학생의 역량 강화 등을 RISE 중심의 협업 과제로 추진
 - [중기부] 유학생 온라인 매칭 플랫폼 개설(‘24.하),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-유학생 연계 프로그램 신설(‘25.), 수요기반 외국인 유치활동 지원
 - [교육부] 지역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정을 계약학과·주문식교육과정 등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기업과 취업 연계성 강화
- ▶ (추진체계) 교육부-중기부-지역 연계를 통해 기업-대학 간 유학생 인력의 수요-공급 매칭, 산업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개설, 정주여건 마련 등 **종합적인 연계 지원**

7 **중기+교육** 지역대학 중심 창업지원 : 연계 1유형

- ▶ (필요성) 대학은 기술·인력·장비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한 혁신 주체이나, 대학의 지역 창업 거점으로서의 역할 미흡
- ▶ (내용) 교육부·중기부의 창업지원 연계를 통해 대학 중심 창업지원 추진체계 마련
 - 지자체(지역 RISE센터)를 중심으로 중기부·교육부가 지자체별 상황, 대학의 강점 등을 고려한 RISE 연계 모델 발굴 지원
 - 교육부 대학 내 창업지원(창업친화적 학사제도, 창업교육 등)과 중기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(사업화 자금, 기술개발, 인력 등)을 연계한 창업지원체계 마련
 - [중기부] 창업중심대학에 지역별 RISE 연계 프로그램 도입하여 지역 내 타 대학의 RISE 과제와 중심대의 창업지원*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
- * 사업화 지원(자금, 역량 강화), 투자유치 지원, 창업 경진대회, 실험실 창업 지원, 네트워킹 등
- [교육부] 지자체(지역 RISE 센터)에서 프로젝트 기획 시 지자체별 상황, 대학의 강점을 고려하여 대학창업 활성화, 지역 스타트업 육성 관련 창업중심대학 연계 과제 포함
- ▶ (추진체계) 중기부-교육부-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등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창업지원 모델 마련 추진

[참고] 창업중심대학, RISE 협업 체계도



2. 글로벌대학 혁신 동행형 규제개혁·제도기반 조성 추진

❖ 대통령 국정브리핑(8.29.) 말씀 : “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벌대학 육성”

❖ 지역의 혁신 골든타임에 대응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혁신 전략
: 대학과 지자체가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계획 수립(Bottom-Up)
→ 중앙정부는 현장이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이행하여 성과창출 지원

❖ 제도개선·규제개혁 이행 방식

① 모든 대학에 적용 가능한 과제 → 법령·지침 개정을 통해 일괄 개선 (전체적용)

② 글로벌대학 적용 후 확산 과제 → 규제특례* 등 성과분석 후 법령·지침 개정 (특례적용)

* 「지방대학육성법」 근거, 지방대학에 한하여 한시적(4+2년)으로 법령상 규제 완화·배제 가능

Ⅰ 글로벌대학 주요 혁신 방향('23년 지정대학, '24년 예비지정대학) Ⅰ

| 중점방향 | | 혁신 계획(예시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대학 간 벽허물기 | 통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도1국립대) 자원 확보(critical mass) 및 지역 캠퍼스 특성화 • (일반·교대) 초·중등교육을 아우르는 종합교원양성체제 구축 • (일반·전문대) 학사·전문학사과정으로 산업인력 적소 배출 |
| | 연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구조조정) 비교우위 특성화 연계 학과 조정·정원 감축(Big-deal) • (공동활동) 수익형 통합산단, 해외 공동진출 등 자원 공동활용 |
| 대학·연구기관 벽허물기 | 역량집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클러스터) 유휴부지에 연구소를 유치하여 인프라 칸막이 제거 • (공동연구소) 대학과 출연연·지역연구기관 융합연구원 설립 |
| | 전략적협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인적자원) 교원·연구원 JA·인사교류, 청년연구자 주거·활동 지원 • (공동활동) 연구소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, R&D, 기술사업화 등 |
| 대학·산업체 벽허물기 | 기업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복합타운) 캠퍼스 연계 Start-up village 등 일자리·연구·주거 집적 • (AI-DX 지원) 국가산단 디지털 전환, 지역산업 데이터 유통 허브 |
| | 수익창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사업화) 유망기술 발굴·기술개발지원·투자 → 교육 재투자 • (해외진출) 특화사업화 및 해외 판로 개척·수출 → 교육 재투자 |
| 공통 (체질개선) | ↑ | |
| | 학사개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전공선택권) 자율전공선택제·융합교육 등 탄력적 학사 운영 • (지역수요) 지역특화산업 중심으로 단과대·학과전공 등 구조 개편 |
| | ↑ | |
| | 성과중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보상체계) 성과를 창출한 교원을 우대하는 보상체계 마련 • (인사교류) 외부 전문가의 대학 경영·교육 참여 채널 확대 |

① 대학 간 벽허물기 : 통합 유형별 우려사항을 해소하여 통합 촉진

【 혁신을 통한 변화 】

- 대학 간 강점과 자원을 집약하여 사회변화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, 지역수요·설립목적에 따른 캠퍼스 특성화 수단으로 통합 논의* 확산

* 통합 추진 중(10.8%) + 통합 가능 대학 찾는 중(13.7%) + 타 대학 제의시 고려(33.3%) 등 통합 염두 대학 57.8%(교육부 출입기자단 일반대 총장 102명 대상 설문조사, '24.2월)

- 국립대학의 경우 ▲권역 모든 대학이 통합 추진(강원) ▲교육대-종합국립대 통합 논의 본격화* ▲지방공립대-국립대 통합 확산** 경향

* 학생 및 교원 정원 감소 대응 전략으로 교육대-사범대 통합을 통한 시너지 확보

** 지방공립대 7교 중 5교(71.4%) 통합 추진(경북도립대는 안동대와 통합 승인 완료)

【 저해 요인 】

- (국립대-국립대) 중심대학이 본부로 타 대학은 캠퍼스로 개편 시, 의사결정권한과 자원이 중심대학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 우려

※ 과거 통합 준비 과정에서 통합 이후의 대학 운영에 대한 대학 간, 소재지역 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어 통합 논의가 결렬되는 사례 발생

- (종합국립대-교육대) 교육대가 단과대로 단순 편입될 시, 이전보다 자원이 부족해져 교원양성 질 저하 및 사범대와 시너지 창출 한계

※ 통합대학의 재정 여건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교육특화캠퍼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학이 아닌 종합교원양성단위(교육대학+사범대학)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허용 요청

- (국립대-공립대) 대학의 전문학사학위 운영 근거가 없어 경쟁력있는 전문학사과정도 통합으로 인해 일괄 폐지되어 고등직업교육 위축

※ 안동대-경북도립대는 당초 통합 이후에도 일부 전문학사과정을 유지하려 하였으나, 현행법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전문학사과정을 모두 학사학위과정으로 전환

- 공립대 시설은 공유재산으로 국립대가 캠퍼스로 사용할 수 없고, 임대를 허용해도 소유·사용주체가 분리되어 투자 저해* 가능성

* 시·도와 함께 추진한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별도 사용승인 허가 필요, 대학이 국고로 건축물 등 신축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투자 유인 저하

【 혁신 지원방안 】

- 1도1국립대 거버넌스 제도화로 캠퍼스 특성화 및 지역발전 도모 전체적용
 - 대학 전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*와 캠퍼스 운영·관리를 총괄하는 캠퍼스총장을 신설하여 지역·캠퍼스별 균형발전 도모
- *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(통합국립대학 지정 및 통합국립대학위원회 근거 신설)

[해외사례] University of California

- 캘리포니아는 공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(UC 10교), 교육중심대학(CSU 23교), 산업중심대학(CCC, 115교) 구분, 연구중심대학 총괄 시스템을 두고 UC를 특성화 영역별*로 지원
- * UC버클리(공학), UC데이비스(농업, 생명공학), UC산타크루스(항공우주과학) 등
-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총장(president)·캠퍼스총장(Chancellor) 선임·기금 확보·주요정책 수립, 캠퍼스는 대학행정에 자율권을 갖고 독립 운영

- 교대 통합대학을 종합교원양성대로 지정하여 교원 기능 집약 전체적용
 - 교육-사범대가 초·중등을 아우르는 완결적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교원 대상 연수 등 종합 역할을 수행토록 별도 지원 추진
- ※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(국립대-교육대 통합시 종합교원양성대 지정·지원 근거 신설)
- 공립대 통합대의 전문학사 운영 및 공립대 캠퍼스 활용 촉진 전체적용
 - 대학에 전문학사학위 유지 정원과 학사학위 이관 정원에 관한 운용 선택권(portfolio)을 부여하여 지역산업인력수요에 탄력 대응
- ※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(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에 한하여 기존의 학사학위 뿐만 아니라 전문학사학위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)
- 국립대-공립대 통합대학은 지자체가 보유한 교지·교사를 임차하여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
- *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추진(교지·교사 소유 원칙의 예외조항 신설)
- 기존 공립대 교지·교사의 소유권을 국가(국립대학)에 양여를 희망하는 시·도에서 해당 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
- ※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추진(국립대와 공립대가 통합하여 국립대로 전환할 경우, 공립대 지원 사무가 국가사무로 이관되며,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할 수 있음을 명시)

② 대학-연구기관-산업체 간 벽 허물기

【 혁신을 통한 변화 】

- 대학 중심으로 출연연 분원 집적 등 학연 조직·인력 등 칸막이를 제거*하여 세계적 연구·교육을 위한 임계규모(critical mass) 확보
- 석학·산업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주요 보직에 임명하여 강력한 혁신을 도모하거나 교원으로 임용하여 교육·연구력 제고 추진

【 저해 요인 】

- (외부인사 보직 임용 제한) 국립대 부총장·대학원장·단과대학장 등 보직은 교원만 임명 가능*하여 외부인사 영입 한계

* 경상국립대, 우주항공대학장과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장을 개방형 공모로 임명하고 운영 전권 부여 → 교육공무원법상 소속 교수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어 공모 제약

- (외부인사 연봉 제약) 지방국립대는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대학이나 연봉책정이 자유로운 사립대에 비해 정상급 인재 경쟁에 불리

- (우수교원 초빙 제약) 검증된 석학이나 산업계 인사를 전략적으로 초빙하는 경우에도 정년제한* 및 채용절차**로 교원 활용 저하

* 국립대 비전임교원 정년은 전임교원과 동일한 65세 적용, 초빙을 통한 역량 활용 불가

** 겸·초빙임교원은 강사와 동일하게 공개채용 원칙 적용, 우수 인력 적시 활용 곤란

- (계약학과 이동수업 제한) 교지·교사 외 대학 소유 시설에서 운영 불가

** 경상국립대,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사천시 소재 사이언스파크(대학 소유)에 계약학과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→ 부지가 교지로 인정받지 못하여 설치 제한

- (현장실습 투자 제한) 대학의 현장실습비 지원 상한이 일률 적용 (25% 이내)되어 산업체 재원부담으로 인해 현장실습처 확보 곤란

* 순천대, 지역산업 기반으로 학사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진로교육 및 실무 교육강화를 위해 국비·지방비를 활용하여 현장실습 확대 추진 → 지급 제약으로 운영 제한

【혁신 지원방안】

○ 지방국립대학 주요 보직에 개방형 공모제 운영 허용 **특례적용**

- 외부인사를 부총장·대학원장·단과대학장 등 조직의 장으로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 도모

* 규제특례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)를 통해 희망대학이 개방형 공모제도를 활용토록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7조 제1항(부총장·대학원장·단과대학장의 보직) 적용 완화

○ 지방국립대가 영입한 외부 인사에 파격적 처우 적용 **특례적용**

- 지방국립대에서도 수도권대학이나 대기업과 경쟁하여 특화 분야에 정상급 인사를 초빙*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연봉 특례 활용

* 우수전문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연봉 책정 특례 적용 직위·분야 지정 등

○ 겸·초빙교원 임용기준 특례 시범 운영 **특례적용**

- 비전임교원 정년 완화 및 공개채용 절차 예외를 두어 검증된 우수 연구자·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* 규제특례를 통해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(비전임교원에 대한 전임교원 정년 기준 적용)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조의11(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) 적용 완화

○ 계약학과 이동수업 가능 장소 확대 **전체적용**

- 권역 내 대학 소유 시설에서의 계약학과 이동수업 허용**

** 계약학과설치·운영규정 개정(대학의 교자·교사를 활용하는 원칙은 유지하되, 이동수업 가능 장소를 산업체 보유·임차 시설에서 대학 소유 시설로 확대)

○ 대학의 현장실습 지원금 상한 탄력 운영 **전체적용**

- 공공기관·출연연 등 내실있는 기관은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아도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금 상한 미적용

※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(교육부고시) 상, 대학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활용해 실습처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(최저임금의 25%)을 일부기관에 한해 미적용

3 국립대학의 혁신동력 확보

【저해 요인】

-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달리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한계

【혁신 지원방안】

- 글로벌대학에 우선적으로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운영 **특례적용**
 - 총장이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직원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글로벌대학 지원금의 5% 이내에서 인센티브* 지급 허용
- * 정례적·지속적인 보수·수당 지급이 아닌 글로벌대학 혁신 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

IV. 향후 일정(안)

- RISE 및 글로벌대학 관련 제도개선·규제개혁 추진 : '24.9월~
- 시도별 RISE 계획 확정('24.12월) 및 사업 추진 : '25년~

참 고

글로벌대학 규제개혁 주요 추진과제 (요약)

| 구분 | 주요내용 | 적용대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
| 대학 간 벽허물기 | (현행) 국립대 통합시 타 대학과 동일한 단일 총장 거버넌스 (개선) 대학위원회 + 전체 총장(system office) + 캠퍼스총장 ※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| 전체대학 (국립대학) |
| | (현행) 교육대 통합시 단과대학 형태로 편입 (개선) 통합대학을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(교-사대 융합) ※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| |
| | (현행) 국립대 통합시 전문학사 일괄 폐지 / 지자체 소유 시설 국립대 캠퍼스 운영 불가 / 통합시에도 공유재산 유지 (개선) 전문학사 동시 운영 / 국·공립 통합 대학에 한해 지자체 시설 국립대 캠퍼스 허용 / 공유재산의 국가재산 이관 허용 ※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,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추진 | |
| 대학-산업체- 연구기관 벽허물기 | (현행) 대학원장·단과대학장 주요 보직에 교원만 임명 가능 (개선) 외부 인사 임명 허용(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 도모) ※ 규제특례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적용 완화 | 글로벌대학 (국립대학) |
| | (현행) 외부이나 영입시 국립대 직원 보수 기준 동일 적용 (개선) 정상급 인사 초빙(임기제) 시 파격적 보수 적용 ※ 연봉 책정 특례 적용 직위분야 지정(공무원보수규정 예외기준) | |
| | (현행) 비전임교원에 정년기준(65세) 적용 (개선) 검증된 인사는 정년기준 예외 부여 ※ 규제특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적용 완화 | |
| | (현행) 겸·초빙교원도 공개채용 절차 필수 (개선) 검증된 인사는 공개채용 예외 부여 ※ 규제특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적용 완화 | 글로벌대학 |
| | (현행) 대학의 현장실습처 지원금액 상한(최저임금 25%) 적용 (개선) 공공기관 및 출연연은 지원금액 상한 미적용 ※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개정 | 전체대학 |
| | (현행) 계약학과 이동수업은 산업체 보유·임차시설에서 허용 (개선) 계약학과 이동수업 장소를 대학 소유 시설로 확대 ※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(고시) 개정(권역 범위 검토 중) | |
| 국립대학의 혁신동력 확보 | (현행) 글로벌 사립대만 교직원 인센티브 허용(사업비 5%) (개선) 글로벌 국립대에도 同 기준으로 교직원 인센티브 허용 ※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 | 글로벌대학 (국립대학) |